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7
------	-----

2015. 6.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7일, 김현아 의원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6.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현아 의원)

가. 주문

-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환경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직업훈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통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안을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고용 기조에 따라 일자리없는 성장으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로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4개의 기술교육원(동부·중부·남부·북부)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교육과정과 현 교수진의 전공과 역량에 따른 한계 그리고 4개의 기술교육원의 중복된 교육과정 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기술교육원의 개혁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교육부 등의 건의를 통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안을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함

다. 이송처 : 서울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건의안의 개요

-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통하여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구축과 서류전형을 통한 대학입학 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안을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나. 기술교육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은 서울시가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울 경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4개의 기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음

<표 1> 기술교육원 현황

기관명	위치	수탁기관	위탁기간
동부	강동구 고덕로 183	(학교법인) 경북대학교	'14.3.1~'16.2.29 (2년)
중부	용산구 한남대로 136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15.3.1~'17.2.28 (2년)
남부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13.3.1~'16.2.29 (3년)
북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14.3.1~'16.2.29 (2년)

- 최근에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훈련수요자 요구의 다양화, 민간 직업훈련과의 차별성 확보, 취업의 질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기술교육원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기술교육원은 민간직업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오랜 경력의 교강사들에 의한 현장 전문성 반영이 미흡하며, 전액 무료 교육임에도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취업의 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¹⁾
- 또한 우리사회의 학력중심주의 풍조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교육을 이수하고도 사회적인 인정 또는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여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서울시는 현재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능력표준 훈련기준과 교재의 개발이 완료되는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또한 훈련과정개편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업수요와 훈련과정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기술교육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임.
- 이와 별도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현장경험을

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 2013.

가진 사람에 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없이도 별도의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 현재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일부대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음²⁾

- 서울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건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써의 기술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고령화·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저성장·저고용 기조의 고착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의 증가로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개발과 전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산업·기술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으로 직업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동부·서부·중부·북부 4개의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인력의 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현재 취업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교수진의 전공과 역량에 따른 한계, 4개의 기술

교육원의 중복된 교육과정 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따라 개편하여야 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수요와 취업현장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4개의 기술교육원의 개별적 운영에 따른 영세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수료와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실무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신 서류 전형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실적인 직업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통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안을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